



주간통일정세 2010-15(2010.04.05 ~04.1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1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인민보안성→부(部)개편…권부핵심 부상?(4/6, 조선중앙통신)
 -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보안성의 조직 명칭이 ‘인민보안부’로 바뀜.
 - 조선중앙TV는 5일 오후 8시 정규 뉴스 시간에 평양시 ‘10만 가구 살림집 건설’ 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보안부 건설여단’의 일원인 림성철 씨 인터뷰를 다뤘고, 임씨도 “우리 인민보안부”라고 자신의 소속 기관을 밝힘.
 - 과거 인민보안성은 북한 내 치안 유지와 사회 통제를 담당하는 일종의 무력기관으로서, 형식상 내각 소속이었으나 실제로는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지휘를 받아옴.

- 北 군인신문, 김정은 후계 노골적 암시(4/7, 열린북한방송)
 - 방송은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기관지인 ‘조선인민군’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의 생일인 지난 1월 8일 자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이 속한 4월과 2월을 거론한 후 “선군시대의 미래의 봄은 1월부터 시작된다”는 표현을 사용, 3대 세습을 노골적으로 암시했다고 전함.
 - 신문은 개인 필명 기사 ‘1월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 인민은 아버지 수령님(김일성)의 은덕을 길이 전하며 4월의 봄을 노래했다.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일)를 끝없이 신뢰하며 2월은 봄이라고 소리높이 구가했다”며 “오늘 우리는 선군조선의 미래의 봄은 1월부터 시작된다고 격조높이 칭송한다”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함.

- 北김영춘 ‘반북 침략기도 예리하게 주시’(4/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를 통해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오늘 조선반도(한반도)에는 의연히 긴장되고 첨예한 대결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 침략기도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단호하고도 무자비



한 징별로 원수들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말 것”이라고 위협함.

-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총리, 리용무·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전병호·최태복·김국태·김기남·김중린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최영립 평양시당 책임비서, 로두철·오수용 부총리 등 북한의 당·정·군 간부들이 모두 참석함.

■ 4월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통일운동 개최

- 北, 금년 예산 6.3% ↑.. 작년 이어 헌법 또 개정(4/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9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작년에 이어 헌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작년 대비 6.3% 늘어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킴.
 -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제12기 최고인민회의 통일운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헌법 개정안이 채택
 - 헌법 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됐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작년 1월 내정된 김정은(김정일 위원장 3남) 후계구도와 연관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음.
 - 박수길 내각 부총리 겸 재정상은 보고를 통해 “지난해 국가 예산수입은 101.7%로 초과수행됐고 국가예산지출은 99.8%로 집행됐다. 올해 국가 예산수입 계획은 작년의 106.3%로, 국가예산지출 계획은 108.3%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작년 추정예산액(4천 826억원)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올해 북한의 예산총액은 구권 5천 21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를 신권으로 바꾸면 52억 1천 700만원이고, 미화로 환산하면 5천 217만 달러(1달러당 신권 100원 기준)
 - 하지만 일각에서는 작년 11월말 ‘구권 100원 대 신권 1원’ 비율로 화폐교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올해 예산안이 신권 5천 217억원으로 짜여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으며, 이럴 경우에도 표시 액면만 비교하면 작년 대비 6.3% 증액한 것이 됨.
 - 분야별 예산 증감을 보면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5.8%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신년공동사설의 ‘인민생활 향상’ 약속과 직결되는 경공업은 10.1%, 농업은 9.4% 각각 증액
 - 이와 관련 김영일 총리는 “올해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소비품과 알곡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인민경제의 기술 개선(개선)과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중심을 두고 대고조 전투를 힘있게 조직해 나가자”고 말함.
 - 이번 회의에서는 또 조직 문제도 논의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의 최영립 서기장이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옮기고, 변영립 전 국가과학원장이 그 자리에 보임됐으며, 최고검찰소 소장에 장병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임명
 - 그러나 남한, 미국 등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관측이 무성했던 외자유치 관련 법령 정비도 이뤄지지 않음.



- 北김정일 최고인민회의의 불참…추측 ‘무성’(4/9,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의 불참이 처음은 아니지만, 행사 직전까지 ‘중국 방문 임박설’이 무성했던데다 건강 상태도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
 - 하지만 이날 회의 불참이 방중과 연관됐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
 -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김 위원장한테 시시때때로 따라붙는 ‘건강이상설’
 - 그런가 하면 ‘일시적 과로설’도 설득력 있게 제기,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소집일은 공교롭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7주년’과 겹쳐 전날인 8일 성대한 기념행사 등으로 김 위원장이 과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 김 위원장은 1998년 9월 최고 통치자로 공식 등극한 이후 2002년까지는 빠짐없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했으나, 2003년 3월에 열린 ‘10기 6차 회의’에 처음 불참한 뒤 2004년 ‘11기 2차’, 2006년 ‘11기 4차’, 2008년 ‘11기 6차’까지 모두 4차례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4년부터는 격년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했으며, 이 규칙대로 따지면 이번 12기 2차 회의는 불참 순서가 됨.

■ 김정일동향

- 4/9 김정일 위원장, “희천발전소 건설지원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김금희(경공업성 부원) 등 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 (4/9,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발표(1993.4.6) 17돌 즈음 통일위업 전진을 위한 「6.15·10.4선언」실천과 민족대단결 강조 (4/6, 중통)
- 北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정령, 駐스위스 北 대사에 ‘서세평’ 임명 (4/6, 중통)
- 北 청년학생들, 4.6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7돌 경축모임 김중린 등 참가下 청년중앙회관에서 개최 (4/6, 중방)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1993.4.9) 17돌 즈음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4/7, 중통)
 - 김중린(黨비서), 김병팔(직총 위원장, 경축보고) 등 참가下 당창건기념탑장에서 진행

나. 경제

- 北, 심각한 재난 상황 아니다(4/6, 평양이타르타스; 연합뉴스)
 - 북한이 심각한 재난상황에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유럽연합지원계획’(EUPS)의 한 직원이 5일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힘.



- 현재 북한을 여행 중이라는 이 EUPS 직원은 “어느 곳에서도 기근이나 공핍의 신호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함. 그리고 “거리에서 군인이 그리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북한의 군사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군대가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임.
- 인도 미탈, 北무산광산 지분인수 협의(4/6,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에 따르면 인디아타임스는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미탈의 락시미 미탈 회장의 동생인 프라모드 미탈 글로벌스틸홀딩스 회장이 북한을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과 무산광산 지분 확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채광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건설비용을 포함해 무산광산 개발에 필요한 투자금액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고 전함.
 - 하지만 신문은 프라모드 미탈 회장은 자신의 방북 목적에 대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말했다고 덧붙임.
 -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프라모드 미탈 회장이 지난달 29일 4박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영일 내각 총리 등을 만났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음.
- 中룽징-北청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추진(4/9, 장춘일보; 연합뉴스)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룽징(龍井)시가 북한 청진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기로 하는 등 동해 진출을 위한 국제물류통로 개척을 추진 중이라고 장춘일보(長春日報)가 보도
 - 룽징시는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 추진을 계기로 관내 북한 접경인 산허(三合)통상구를 국제적 통상구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산허-북한 회령-청진을 잇는 물류 통로를 확보, 동해로 진출하겠다는 계획
 - 룽징시는 이를 위해 산허-청진 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한편 카이산툰(開山屯)과 북한 삼봉리를 연결하는 철도 보수공사에 나서기로 하고 북한과 협의 중, 또 산허에 국제무역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룽징과 회령 일대를 묶어 국제경제협력구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
- 中투먼-北남양 국경 도보관광 인기(4/9, 동아경무신문; 연합뉴스)
 - 중국 국경도시인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서 두만강을 넘어 북한 남양시 공인구까지 걸어서 가는 국경 도보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동아경무신문(東亞經貿新聞)이 보도
 - 투먼시 외사관광국 리창선(李昌勛) 국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투먼이 북한 당국과 합의아래 2개 관광 노선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기에 투먼-남양시간 도보여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 이 도보관광은 2008년 개설된 이후 1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한때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재개



- 中, 12일 북한 단체관광 본격 시작(4/11, 연합뉴스)
 - 북한이 한국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강경조치를 취한 가운데 중국의 북한 단체관광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주목
 - 11일 중국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관리들과 약 400명으로 구성된 단체 관광단이 12일 북한을 찾을 예정이고, 중국 인민지원군의 일원으로 6.25에 참전했던 중국 노병 24명이 6.25 발발 60주년을 맞아 당시 사망한 전우들에게 참배하기 위해 조만간 북한으로 출발
 - 이에 앞서 8일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 일부를 동결하는 등 남측 주도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한 조치를 공언하기 전 중국의 여행사들이 이미 금강산 관광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통청(同程)여유망에 따르면 쑤저우(蘇州)청년여행사는 평양과 개성, 3.8선, 금강산, 원산을 둘러보는 4박5일 일정의 여행 상품의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 기타 (대내 경제)

- 北 평양인쇄공업대학 정보센터, 문서편집·표 계산·자료기지원리 등으로 구성된 문서처리체계 개발로 사용자들에게好評(4/6, 중통)

다. 군사

- 北, 천안함 침몰 관련 전군 경계태세(4/7,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전군에 고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
 - 또한 방송은 함경북도 청진의 9군단 관계자 말을 전한 익명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지난 4일 인민무력부에서 전군에 지시문을 보내, 최근 미제와 침략전쟁 연습에 돌아치던 남조선 해군 함선 한 척이 서해 바다에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렸다”면서 “(지시문은 또) 이 함선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이 사고 원인을 우리 공화국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고 전함.
 - 지시문은 이어 “미제와 남조선 군부세력들이 저들의 함선이 바다에 수장된 것을 우리 공화국과 연결시키는 것은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면서 “만약 적들이 모략책동에 매달린다면 인민군대는 단매에 짓부술 만반의 전투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

라. 사회·문화

- 北, 김책공대에 졸업학점제 처음 도입(4/5, 조선신보)
 - 북한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총장 홍서헌)이 4월 1일 시작된 올해 새 학년도부터 졸업 이수학점제를 처음 도입하고 선택과목제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고 전함.



- 북한의 대학은 학급제로 운영돼 남한의 중고교처럼 거의 획일적인 교육을 받으며, 과목별 시험에서 낙제한 학생만 재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문은 김책공대의 새 학년 개학식 소식을 전하면서 교무부 리명월(46) 교수의 말을 인용, 2006년 이후 4년 만에 “수강 과목을 임의로 선택하는 ‘선택과목제’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고, 졸업에 필요한 수득학점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교육강령을 개정했다”고 전함.
 - 또한 “여러 나라 대학교육에 대해 요해(파악)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취한 조치”라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학생들이 더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전공 분야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임.
 -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출신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그동안 북한 당국에 있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이랄 수 있는 발상”이라면서 “선택과목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종합대학의 고학년 전공반 일부에서 운용됐으나 수득학점수 제도의 도입은 처음”이라고 말함.
- 나는 ‘표창결혼’ 덕택에 세상에 태어났다(4/7, 연합뉴스)
- 1982년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 14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출생해 20년 넘도록 수용소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오다 2005년 북한을 탈출한 신동혁(28) 씨가 7일 브뤼셀의 유럽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증언함.
 - 신 씨는 “내 아버지는 1965년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왔다. 수용소에서는 근로 태도가 좋은 남녀를 짝지어주는데 이를 ‘표창결혼’이라고 한다. 나와 내 형은 표창결혼 덕택에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자신을 소개함.
 - 그는 “수용소에서는 ‘부모의 젓값을 치르려면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도 노동을 강요했다”라고 증언, “수용소에서 받는 교육은 기본적인 글쓰기 · 읽기와 일하는 법이 고작”이라며 “그곳에서는 사상교육조차 시키지 않는다. 수용소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임.
 - 수용소 삶에 대해서는 “수용소에서는 말 한 마디 잘못하거나 행동거지 하나 잘못할 때, 하루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때 가차 없는 처벌이 있게 되며 심하면 공개처형을 당한다”라고 전했으며 “그곳에는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돼 있다”, “가족 한 사람이라도 잘못했는데 보고되지 않으면 가족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이처럼 악랄한 감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힘.



- 북한 축구팀, 월드컵 직전 짐바브웨서 전지훈련(4/8, 연합뉴스)
 - 북한 축구 대표팀이 오는 6월 11일 개막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대회에 앞서 짐바브웨에서 5월 25일부터 2주간 전지훈련을 할 예정으로 알려짐.
 - 음젠비 장관은 “북한 대사관 측과 북한 대표팀의 훈련 일정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국제 구호단체인 ‘JTS(Join Together Society)’는 6일 오후 인천항 1부두에서 북한에 보낼 컨테이너 60대 분량의 식량과 생필품 선적식을 가짐 (4/6, 연합뉴스)
- 北 조선우표사, 태양절 기념우표(개별우표 4종) 새로 발행 (4/6, 중통)
- 태양절(4.15) 즈음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4/7, 중통)
 -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김중린(당비서)·박학선(체육지도위원장/개막연설) 등 참가자 개막

2. 대외

가. 일반

- 주북中대사, 5일 6.25 참전용사묘 참배(4/6, 연합뉴스)
 - 류홍차이(劉洪才) 신임 주북한 중국대사가 청명절(淸明節)인 5일 평안남도 회창군의 6.25(한국전쟁) 참전용사묘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짐.
 -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류홍차이 대사는 5일 주북 대사관 전체 외교관과 함께 평양시내에 있는 북·중 ‘혈맹’ 관계를 상징하는 우의탑에 헌화한 뒤 평양에서 100km 남짓 떨어진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묘로 향한 것으로 확인됨.
 - 류 대사는 240만 명의 인민지원군을 상징하는 240개의 돌계단을 밟고 열사묘에 도착, 마오안잉에게 헌화하고 묵념했으며 이곳에다 향나무 두 그루를 직접 심으며, “이들은 중국의 아들이자 북한 인민의 아들이기도 하다”면서 “올해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중국과 북한 양국이 기념행사를 공동개최할 것”이라고 말함.
- 北, 억류 미국인 곱즈 씨 ‘8년 노동교화형’(4/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불법입국 혐의로 억류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곱즈(30) 씨를 6일 재판에 넘겨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형을 언도했다”고 전함.
 - 또한 “재판에서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공화국 형법의 해당 조항들에 준해 유죄를 확정했다”며 “피소자는 기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이권을 보호하는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주조(주 북한)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의 재판 참관이 특례적으로 허용됐다”고 밝힘.

- 유엔 기자실의 北 ‘태양절’ 보도자료(4/9, 연합뉴스)
 - “북한 인민들은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the Day of the Sun)로 기념하고 있다. 사회주의 코리아의 창시자인 김 주석은 최고수준의 빛과 열, 매력을 소유하고 있어 태양에 비유된다”, 7일 맨해튼 유엔본부 기자실에 지난달 29일자로 발행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명의의 3쪽 짜리 보도자료가 눈길
 - 고 김 전 주석의 생일로 북한이 기념하고 있는 태양절을 맞아 전 세계에서 파견된 유엔 기자들을 대상으로 뿌린 것으로 김 전 주석 미화로 일관
- 北, 외무성 부상에 前주중 공사 전격 발탁(4/11, 연합뉴스)
 - 북한 김성기 전(前) 주중 공사가 최근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승진한 김영일 전 부상(차관급)의 후임으로 외무성 부상에 전격 발탁된 것으로 확인
 - 11일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류홍차이(劉洪才) 신임 주북 중국대사가 지난 1일 자신의 취임을 기념하기 개최한 리셉션에 김성기 전 주중 공사가 외무성 부상 자격으로 참석

■ 기타 (대외 일반)

- 스웨덴 적십자사 대표단(단장 : 「오싸 몰데」부위원장), 평양 도착 (4/5, 중통)
- 김영남, 4.5 세네갈 대통령에게 감사전문 및 다카르 출발 (4/6, 중통)
- 오바마 미대통령은 5일 자위 차원의 경우라도 핵무기 사용 조건을 크게 제한하겠지만 북한과 이란과 같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외자(outlier)’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언급 (4/6, 뉴욕타임스)
- ‘과거청산은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 題下 최근 독일에서 나치전범자 종신형 언도 등을 실례를 들어 “과거청산 회피” 對日 적개심 분출 (4/7, 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北외무성 “핵무기 더 늘리고 현대화할 것”(4/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9일 미국의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와 관련,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역제력으로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늘리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지난 6일 발표된 미국의 NPR보고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북한과 이란을 대상에서 제외
 - 이 대변인은 그러나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라면서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
- “北급변사태시 최악각본은 美·中 軍 충돌”(4/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최악의 시나리오로 핵무기 통제를 위해 북한에 진주한 미군과 중국군의 군사충돌을 꼽고 있다고 헤리티지 재단이 7일 발간한 ‘북한의 권력 이양이 미국에 미치는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3. 대남

- 북한軍 “대북 전단에 결정적 대응조치 취할 것”(4/11, 조선중앙통신)
-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10일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반북)심리모략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납득할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대해 공식 통고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대는 해당한 결정적인 조치를 곧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

■ 北 ‘금강산 南당국 자산동결·관리인원 추방’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 발표]

- ① 우선 1차적으로 이번 부동산 조사에서 정면도전한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을 추방함.
- ② 이번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함.
- ③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임.
- ④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임.

- 北 ‘금강산 南당국 자산동결·관리인원 추방’(4/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발표해 “남조선 당



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며 4개항의 조치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함.
- 또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관광지구 안의 남측 부동산과 시설을 다 몰수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
-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이어 남조선 당국의 태도까지 지켜보면서 “(남측이) 관광 재개는커녕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도 전혀 없으며 오직 대결에 미쳐있다는 것을 최종 확인하게 됐다”며 “남조선 당국이 극히 도전적으로 나오면서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 하고 있는 조건에서 더 이상 (남측과) 상충하면서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 “(남측에 의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험담이 난무하고 체제대결이 위험 계선을 넘어선 오늘의 정세하에서 이제 관광문제 따위는 더 논할 여지도 없게 됐다”며 “우리는 (남측의) 반공화국 대결과 모략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단호한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北 “금강산부동산 동결 13일 집행”(4/11, 연합뉴스)

- 오는 13일 최근 통보한 금강산 부동산 동결을 집행하겠다고 우리 측 당국자들의 현장 입회를 요구했다고 통일부가 11일 밝힘.
- 통일부는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13일 부동산 동결 등 최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한 금강산 관광 관련 조치 사항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9일 저녁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했다”고 밝힘.
- 북측은 이와 함께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이상 정부 소유),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이상 한국관광공사 소유) 등 5개 동결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계자들은 당일 집행 현장에 입회할 것을 요구
- 이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입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공사 관계자들의 입회 문제는 공사 측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함.
- 북측은 또 통지문에서 지난달 실시한 금강산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현대증권 등 3개 업체들의 사업권을 박탈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NPR, 북한에 큰 영향 주지 못할 것”(4/11)

- 북한을 핵공격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은 미국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가 북한의 비핵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음.
-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방문연구원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옳은 접근이지만,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하지만 그는 “이번 보고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는 매우 유용한 보고서였다”고 말했음.
- 미 국무부에서 북한 담당관을 지낸 위트 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지금까지 좋은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 자체는 아니었다”고 지적했음. 그는 “많은 사람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북한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며, 가뭄될 수도 없다”고 말했음.
- 그는 “이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밀어붙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라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룩한 바탕 위에서 핵문제와 같은 핵심 문제들에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트 연구원은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가 어떤 실질적인 효과도 갖지 못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제재가 북한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무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음.
- 그는 “미국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북한이 핵기술을 해외로 이전시킬 가능성”이라면서 “대북제재가 이를 완전히 차단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려했음.
- 위트 연구원은 김정일 3남 김정은으로의 북한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 “그것이 안 될 이유는 없다. 김정일이 몇 년 더 생존한다면 특히 그렇다”면서 “만일 김정일이 내일 죽는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몇 년 더 산다면 (권력승계에 따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점점 더 작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음.



- 이와 함께 그는 김정일의 중국 방문 가능성과 관련, “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뒤 김정일 방중이 이뤄진다면 그 이전에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물밑 약속을 중국 측에 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이와 관련, 그는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분석”이라면서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는 중국의 정치적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음.
 - 한편 SAIS 한미연구소가 지난 1일 개설한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North’의 운영 책임을 맡은 위트 연구원은 “북한을 직접 다뤄본 경험 있는 사람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좋은 분석을 얻는 것이 목표 중 하나”라면서 이 웹사이트에 오랜 기간 북한 문제를 다뤄본 자신을 포함한 경험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그는 “그동안 공개된 북한에 대한 분석들이 매우 훌륭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우리 웹사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음. 이 웹사이트에는 위트 연구원 외에 평양주재 영국 초대 대사를 지낸 제임스 호어 전 대사, 서방 정보요원 출신으로 북한을 배경으로 한 추리소설 ‘평양의 이방인(국내 번역 제목)’을 발간한 제임스 처치, 대량살상무기 전문가인 제프 루이스,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인 루디거 프랑크, 월드컵전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오랫동안 펼쳐왔던 스티븐 슈 등이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음.
- “北급변사태시 최악각본은 美·中 軍 충돌”<RFA>(4/10)
-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최악의 시나리오로 핵무기 통제를 위해 북한에 진주한 미군과 중국군의 군사충돌을 꼽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음.
 - RFA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7일 발간한 ‘북한의 권력 이양이 미국에 미치는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주한 중국군과 미군의 충돌 혹은 중국군과 한국군이 충돌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음.
 - 보고서를 작성한 이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RFA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지난달 미국 관리와 만나 이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며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 중국은 북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군대를 투입할지 여부와 또 투입한다면 어느 나라 군대를 투입할지와 관련해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음. 그는 또 “중국은 자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정서를 알고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지만 북한이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될 경우 군대를 진주시켜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과 치안유지, 핵무기를 통제하는 임무에 나설 것”



이며 “북한의 붕괴를 막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북 개입을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클린턴 “北 핵무기 1~6기 보유”(4/10)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9일 미국은 북한이 “1~6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켄터키주 루이빌대학 연설에서 북한의 내부 불안정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이 결국 재개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북한 핵무기 추정치와 관련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
- 그는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가 회담 재개에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회담장으로 복귀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와 북한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주민 불만으로 6자회담 재개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장관은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체결한 새 핵무기감축 협정과 관련해 초당적인 지지를 촉구하면서 협정 기준은 미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응할 때 국제적인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으로 이란과 북한의 ‘행태’가 변할 것이라는 말은 아니라며 “하지만 우리가 새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1)을 이행하려고 노력한다면 다른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 北외무성 “무기 더 늘리고 현대화할 것”(4/9)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의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와 관련,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억제력으로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늘리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외무성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할 능력이 충분하며, 미국이 그렇게 할 이유와 명분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지난 6일 발표된 미국의 NPR보고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북한과 이란을 대상에서 제외했음.
- 이 대변인은 그러나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라면서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 앞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에 해당)은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미국



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 침략기도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로 원수들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北, 북미접촉 조건부 6자 복귀 시사(4/9)

- 북한은 북·미 추가접촉을 조건으로 6자회담 예비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표명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해야 추가접촉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북·미간 추가 고위급 대화 성사여부가 불투명해보임.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연초부터 중국이 움직이면서 회담과정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이 표명된 것 같다”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 이에 앞서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8일 “북한은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본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에 지난 3월 하순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으며, 북한의 비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날 기사에서 “그동안 조선은 6자회담에 대해 미국의 체면을 지켜주고, 중국을 내세워 비핵화회담 재개를 청탁해온데 대해 적절한 회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해야 추가 접촉을 허용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확실히 약속하거나 6자회담 복귀날짜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 북한은 지난 2월부터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통한 북·미 추가접촉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먼저 약속해야 한다며 추가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한 핵심 당국자는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이 6자회담에 확실히 복귀한다고 약속한 게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서는 김 부상의 방미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 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평화협정 회담 ▲제재완화를 철회했는지 여부에 대해 “북한은 북·미 추가접촉을 통해 제재를 푸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평화협정 문제는 6자회담이 열린 이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중국은 각방의 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 정부는 6자가 모이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이 당국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한·미간 조율방향에 대해 “(사고 원인에 대한)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특정한 방향을 상정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① “美 새 핵 보고서, 北·이란 겨냥한 것” <NYT> (4/7)

-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핵정책 보고서는 이란과 북한이 자국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재고하도록 하는데 주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음.
- NYT는 7일자에 실은 해설기사에서 핵정책보고서가 냉전시대로부터 물려받은 대규모 핵무기는 자살 테러리스트나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정권에 대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명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전략은 북한이나 이란의 핵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NYT는 이 보고서가 비핵국가의 경우 미국의 핵 보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이란과 북한의 경우 ‘아웃라이어’(outliers. 국외자, 임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로 지칭되면서 그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음.
- 하지만 이 단어는 부시 행정부에서 사용된 ‘불량 국가들’(rogue states)과는 달리 해당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길로 돌아갈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핵공격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선택된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의 고위보좌관이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6일 브리핑에서 “이란과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전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는 비핵국가들의 경우 재래식이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했음지라도 미국의 핵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규정을 어기거나 핵 확산 국가가 될 경우 모든 대응수단이 강구될 것임”을 강조했다.
- NYT는 그러나 이처럼 이란이나 북한을 공개적으로 대상국가로 지목하는 것은 핵무기만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 국가의 강경파들을 더 득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② 유 외교 “北 머지않아 6자회담 복귀 기대” (4/8)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가능성과 관련, “머지않아 북한도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6자회담에 대한 유용설, 무용설 등이 나오는데 6자회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 유 장관은 “6자회담 개최 시점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6자회담에 나오는 게 북한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관계 당사국이 활발한 외교적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음. 그는 또한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음.
- 이와 함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화폐개혁 실패 책임에 따른 박남기 북한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의 총살설과 관련, “구체적으로 확인드



릴 수는 없지만, 1월 9일 이후 박남기 전 부장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 현 장관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 “만성적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체제 존립과 직결될만한 직접적 상황이나 증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클린턴 “北, 협상복귀만으로는 부족”(4/9)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제재 없는 관계를 이루길 원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미국과 러시아간의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서명식을 맞아 영국 가디언지 기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북한과 관련, 우리는 단순히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이란, 북한과 같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반항하는 국가들에 대해 진정한 결과를 낳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구 중”이라고 말했다.

● 케리 외교위원장, 北역류 미국인 석방촉구(4/9)

- 존 케리(민주. 매사추세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8일 북한이 불법 입국 혐의로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곱즈의 석방을 촉구했다.
- 케리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해서 곱즈를 미국으로 돌려보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곱즈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리 위원장은 곱즈가 자신의 지역구인 매사추세츠주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협의해 그가 안전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앞서 북한은 재판을 통해 곱즈에게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곱즈 씨는 즉각 사면, 석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美, 평화회담 미루면 ‘3차 핵위기’ 올 수도”(4/9)

- 미국이 북한의 평화회담 제안에 조속히 응하지 않으면 ‘3차 핵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밝혀 주목됨.
- 조선신보는 9일 ‘조미(북미)핵대결, 3라운드 진입의 위험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평화회담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 뒤로 미룬다면 1차, 2차 핵위기와 또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의 우



라늄 농축기술을 집중 거론했음.

- 이 신문은 “오바마 정권 내부에서 ‘전략적 인내심’이라는 정치술어가 나오는데 이는 조선(북한)과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말”이라면서 “오바마 정권이 표방하는 전략적 인내심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어 “조선의 국산 경수로 건설은 종래의 비핵화협상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면서 “핵동력공업의 구조를 완비하는데 목적을 둔다 해도 조선이 우리늄 농축기술을 갖게 되면 미국이 다시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은 작년 6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결의 1874호’를 채택하자 자체적으로 경수로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면서 우리늄농축 착수를 선언했음.
- 조선신보 기사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우리늄농축 가능성을 재차 부각시켜, 미국이 평화회담 제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통상 경수로발전소에는 저농축우리늄이 연료로 쓰이지만 저농축우리늄 제조 기술이 핵무기에 이용되는 HEU(고농축우리늄) 기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조선신보는 또 “그동안 조선은 6자회담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의 체면을 지켜주고, 중국을 내세워 비핵화회담 재개를 청탁해 온데 대해 적절한 회답을 줬는데 조선에 급변사태가 임박한 듯한 인상을 주는 정보가 나돌기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급변사태의 부상 배경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오바마 “의무 준수 않는 국가 더욱 고립”(4/7)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배제 선언을 골자로 하는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 대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극단적 폭력주의자들에 의한 핵테러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핵확산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NPR 보고서는 인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와 동맹국의 국가안전은 능가할 수 없는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과 강력한 미사일 방어에 의해 더욱 잘 방어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인식했다”면서 NPT를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배제 및 핵실험 중단, 핵탄두 및 핵무기 개발 중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등의 방침을 확인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들이 역할을 할 좁은 범위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핵억지력 보유” 방침을 확인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은 더욱 더 고립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핵무기 추구가 자신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북한과 이란을 겨냥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늘 발표한 핵정책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했음. 그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안심시키며 잠재적 적들을 막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무기들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밖에 그는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릴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 “향후 4년 내에 전 세계의 취약한 핵물질들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47개국이 약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기금증가를 제안했다”고 전했음.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NPR보고서가 미국의 핵억지력 감퇴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서는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인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보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기브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태세 검토는 좋은 행동을 유인하고, 그들의 의무를 지키는 나라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그런 의무를 준수한다면 국제사회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억류 미국인 고프 씨 ‘8년 노동교화형’(4/7)

-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불법입국 혐의로 억류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프(30) 씨를 6일 재판에 넘겨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형을 언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했다.
- 중앙통신은 “재판에서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공화국 형법의 해당 조항들에 준해 유죄를 확정했다”며 “피소자는 기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이어 “미국의 이권을 보호하는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주조(주 북한)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의 재판 참관이 특례적으로 허용됐다”고 덧붙였다.
- 미국 정부는 북한 내에서 자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해온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지난달 14, 15일 두 차례 고프 씨를 면담했음.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자에게 선고됨.
- 한편 북한의 이번 조치를 놓고, 지난해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억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프 씨 문제를 북미 관계의 쟁점으로 부각시키



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옴.

- 작년 3월 북중 국경에서 취재를 하다 북한 경비병에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는 6월 재판에 넘겨져 12년 노동교화형을 받았으나 두 달 뒤인 8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풀려났음.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음. 북한은 작년 12월 무단 입북한 재미동포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씨도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했으나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는 이유로 42일 만에 석방했음.

다. 중·북 관계

● 北, 외무성 부상에 前주중 공사 전격 발탁(4/11)

- 북한 김성기 전(前) 주중 공사가 최근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승진한 김영일 전 부상(차관급)의 후임으로 외무성 부상에 전격 발탁된 것으로 확인됐음.
- 11일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류홍차이(劉洪才) 신임 주북 중국대사가 지난 1일 자신의 취임을 기념하기 개최한 리셉션에 김성기 전 주중 공사가 외무성 부상 자격으로 참석했음. 이로 미뤄 지난 3월 중국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김성기 부상은 김영일 부장의 뒤를 이어 외무성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부상에 임명된 것으로 보임.
- 한편 북한은 조만간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귀국하고 최병관 신임 주중 대사가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성의 부상급으로 영사국장을 두 차례 역임한 것으로 알려진 신임 최 대사는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최진수 대사와 2주가량 합동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음.

● 中, 12일 북한 단체관광 본격 시작(4/11)

- 북한이 한국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강경조치를 취한 가운데 중국의 북한 단체관광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주목되고 있음. 11일 중국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관리들과 약 400명으로 구성된 단체 관광단이 12일 북한을 찾을 예정이고, 중국 인민지원군의 일원으로 6.25에 참전했던 중국 노병 24명이 6.25 발발 60주년을 맞아 당시 사망한 전우들에게 참배하기 위해 조만간 북한으로 출발함.
- 중국 중신(衆信)여행사 간부인 장하이중(江海中)은 북한은 중국의 45세 이상 관광객이 북한을 찾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이들에게 6.25를 통해 맺어진 북·중 혈맹관계를 상기시키는 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은 이를 위해 6일 일정의 관광코스에 휴전협정 체결장소인 판문점과 3·8선, 북·중 우호의 탑 방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임. 충칭(重慶)에 사는 6.25 참전 노병 24명은 전쟁 중 숨진 전우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만간 자비로 직접 북한을 방문, 추모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창장귀리(長江國旅) 여행사가 밝혔음.



- 또 중국 여행사들이 이미 금강산 관광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음. 중국 통청(同程)여유망에 따르면 쑤저우(蘇州)청년여행사는 평양과 개성, 3.8선, 금강산, 원산을 둘러보는 4박 5일 일정의 여행 상품의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여행 상품 가격은 1인당 5천400위안(88만원)으로 제시돼 있음. 광둥성(廣東) 청년여행사도 홈페이지(www.gdql.cc)에 평양, 개성, 휴전선, 금강산, 원산 등을 관광하는 6일짜리 북한 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음.
- 한편 북한 조성규 조선국제여행사 사장은 12일 북한에 입국할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환영한다고 밝히고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 평양, 개성, 묘향산, 그리고 남포 등의 관광 코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음.
- 그는 북한이 1988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인 이래 매년 2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평양을 찾고 있다면서 장차 더 많은 관광코스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은 지난 2008년 북한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했으나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자국민의 북·중 변방 관광을 허용해오다 지난 2월 단체관광을 정식으로 개방했음.
- 한편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한국 대신 중국에 금강산 관광권을 넘겨준다는 설에 대해 “북한이 초강경 조치를 내놓기 전부터 중국 관광객의 관심이 많은 금강산을 들러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현대아산을 배제하고 중국 업체에 독점적 권리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음.
- 통일부는 지난 9일 북한이 중국의 한 여행사와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약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中룡징-北청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추진(4/9)

- 중국 옌변(延邊)조선족자치주 룡징(龍井)시가 북한 청진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키로 하는 등 동해 진출을 위한 국제물류통로 개척을 추진 중이라고 장춘일보(長春日報)가 9일 보도했음. 룡징시는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 창춘, 지린, 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 추진을 계기로 관내 북한 접경인 산허(三合)통상구를 국제적 통상구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산허-북한 회령-청진을 잇는 물류 통로를 확보, 동해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임.
- 룡징시는 이를 위해 산허-청진 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한편 카이산툰(開山屯)과 북한 삼봉리를 연결하는 철도 보수공사에 나서기로 하고 북한과 협의 중임. 룡징시는 또 산허에 국제무역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룡징과 회령 일대를 묶어 국제경제협력구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임.
- 룡징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산허 통상구를 국제 여객 수송을 담당



하는 국가 1급 세관으로 격상시키고 카이산톤에 국가급 철도 세관을 건설함으로써 두만강 유역의 대표적인 북·중 교역창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훈춘(琿春)시가 지난해 북한 라진항을 동해 진출의 거점 항구로 확보한 데 이어 투먼(圖們)시가 청진항까지 이어지는 노후 철도 보수를 서두르는 등 연변자치 주 도시들이 북한의 항구를 이용해 동해로 빠져나가는 통로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음.

● 靑 “김정일, 중국 안 간 것으로 안다”(4/9)

- 청와대 핵심참모는 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설과 관련, “(중국에) 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참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여러모로 (김 위원장이 중국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에 가깝게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그는 남북한 인사들이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측 정부 협의 하에 비공식 접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확인되지 않는 만남이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정부 당국 간 접촉은 없다”고 부인했음.
- 그는 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베이징에 나타났다는 설에 대해서도 “김계관 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음. 이 참모는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시기 재검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들해진 김정일 4월초 방중설>(4/7)

- 한때 유력하게 제기됐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4월 초 방중설이 점차 사그라지는 양상임. 애초 가장 유력한 방중일로 예상됐던 지난 1, 2일 김 위원장의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데 이어 7일 새벽까지도 김 위원장의 방중 루트인 단둥(丹東)을 넘어온 북한의 여객 열차는 없었음. 6일 밤과 7일 새벽 화물열차가 두 차례 단둥과 신의주를 오갔음.
- 김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할 때 나타나는 경계 및 보안 강화 등의 징후도 단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음. 압록강변은 평소처럼 관광객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수상 유람선도 종전처럼 운행되는 등 평온한 모습임.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오는 9일 개최되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12일 미국에서 열리는 핵 안보회의에 참석하는 등 북·중 양측의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당장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대북 정보통들의 분석임.
- 한 대북 정보통은 7일 “김 위원장이 홀수 해에만 최고인민회의에 출석했다고 하지만 김정은에 대한 후계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참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고인민회



의에 참석한다면 4월 초 방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절박하다면 후 주석이 중국을 떠나기 직전인 10일 이전까지는 방문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도 “이럴 경우 ‘구절’하는 모양새가 될 텐데 그동안 보여 온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이런 ‘저 자세’ 방중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 그는 “북한은 후 주석이 김 위원장을 만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전하는 그림보다 후 주석이 먼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6자회담과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한 후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이 회동하는 형식을 갖추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 “이번 방중 시기를 놓치면 이달 25~28일 정도에나 다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 4월 말 방중에 무게를 실었음.
- 일각에서는 5~6월 방중설도 제기되고 있음.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단둥에 몰렸던 한국과 일본 등 외신 기자들도 6일과 7일 대거 베이징으로 철수, 김 위원장의 방중 감시 ‘아지트’였던 단둥의 중련(中聯)호텔은 한산했음.

● 국정원 “김정일, 25일께 중국 방문 가능성”(4/6)

- 국가정보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오는 25일께 방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 이같이 보고했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의 해외방문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김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25일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中, ‘김정일 방중 미리 발표 않을 것’ 시사(4/6)

- 중국 외교부는 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하더라도 그 시기와 일정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음.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시 일정을 사전에 발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과거 방중 시에는 북·중간 협상을 통해 방식과 일정 등을 결정했다”면서 “여러분이 이같은 방식을 존중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해 미리 발표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음.
- 중국은 과거 김 위원장이 방중했을 때에도 북한 측의 요구로 사전 발표도 하지 않았고 방중 여부 역시 확인해 주지 않았음. 관련 보도 역시 김 위원장의 귀국 후에 나왔었음.
- 장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방중 임박설과 관련해 이날 역시 “현재까지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그는 “우리와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선린우호 협력관계가 부단히 깊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장 대변인은 내외신 기자들에게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간의



고위급 교류와 왕래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국은 (당대당 교류를 관장하는) 유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경우 유관 부서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 주북중대사, 5일 6.25 참전용사모 참배(4/6)

- 류홍차이(劉洪才) 신임 주북한 중국대사가 청명절(淸明節)인 5일 평안남도 회창군의 6.25(한국전쟁) 참전용사묘를 참배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6일 보도했음.
- 주북 중국대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0년 이후 4차례 방문 때마다 모두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로 김 위원장의 방중이 5일까지는 시작되지 않았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임. 통신이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류홍차이 대사는 5일 주북 대사관 전체 외교관과 함께 평양시내에 있는 북·중 ‘혈맹’ 관계를 상징하는 우의탑에 헌화한 뒤 평양에서 100km 남짓 떨어진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묘로 향했음. 이곳에는 1950년 11월25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부에서 미군기의 폭격을 받고 28세의 나이로 숨진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을 비롯한 134명의 참전용사가 묻혀 있음.
- 류 대사는 240만명의 인민지원군을 상징하는 240개의 돌계단을 밟고 열사묘에 도착, 마오안잉에게 헌화하고 묵념했으며 이곳에다 향나무 두 그루를 직접 심었음. 그는 “이들은 중국의 아들이자 북한 인민의 아들이기도 하다”면서 “올해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중국과 북한 양국이 기념행사를 공동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들을 맞은 손석근 회창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전쟁 중에 피로 맺은 양국 선배 혁명가들의 우의는 북중 우호관계를 대대손손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홍차이 대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북한 관영 언론의 김 위원장 동정 보도 3건 중 2건에 관련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 특히 방중이 임박했다면 방중 준비에 한창이어야 할 대사가 대사관 전(全) 외교관을 총동원해 5일 참전용사의 무덤을 참배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해 방중이 다음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日, 대북 경제제재 1년 연장(4/9)

-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연장했음. 일본 정부는 9일 오전 각의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음. 정부는 경제제재의 연장 이유로 북한이 2008년 8월 합의한 납치문제 재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었음.



- 제재내용은 만경봉 92호를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전품목 수입금지 등임. 2006년 자민당 정권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이유로 대북 경제제재를 시작한 이후 제재 연장은 이번이 6번째임.
- 일본 정부는 당초 제재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납치자 문제나 6자회담 문제에서 북한의 자세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1년으로 했음.

마. 기 타

● 유럽의회, 이르면 내달 對北 인권결의안 채택(4/7)

- 유럽의회가 이르면 내달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하이디 하우탈라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7일 브뤼셀 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음.
- 하우탈라 위원장은 오는 6월 초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이 평양과 서울을 차례로 방문하기에 앞서 대북 인권결의안을 긴급 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 평양을 방문하는 한반도관계대표단이 유럽의회 대북 인권결의안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에 인권상황 개선을 압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유럽의회는 지난 2006년 6월에도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하우탈라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유럽의회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음.
-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생자로는 최초로 지난 2005년 탈북한 신동혁(28) 씨가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했음.
- 신 씨는 “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강요 속에 교육이라고는 기본적인 글 쓰기, 읽기 이외에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전부”라고 밝혔음. 신 씨는 또 “수용소에서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라며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이라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으면 가족 모두 처벌받게 된다”라고 증언해 청문회 참석자들을 경악케 했음.
- 청문회에는 또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도 참석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대서양 양안 사이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음.
- 킹 특사는 “북한은 지구상에서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라면서 EU와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음. 그는 청문회 뒤 연합뉴스 기자와 따로 만나 “대북 제재와 결의안 등에도 불구하고 ‘우이독경’처럼 아직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 열매를 맺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위원과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 일부, EU 집행위원회 관계자 및 각종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럽 여론 주도층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음.

● 국제구호단체 JTS, 북한 지원 식량·생필품 선적(4/6)

- 국제 구호단체인 ‘JTS’(Join Together Society)는 6일 오후 인천항 1부두에서 북한에 보낼 컨테이너 60대 분량의 식량과 생필품 선적식을 가졌음.
- 이 단체는 이날 밀가루 300t, 1ℓ 두유 36만개, 생필품, 교육 기자재 등의 지원 물품을 남북 정기화물선에 실어 오는 10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토록 할 예정임. 이들 물품은 평양시와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내 9개 시·도의 50여개 고아원과 양로원, 특수학교에 있는 1만 2천여 명의 어린이가 3개월 동안 먹거나 사용할 물품임.
- 이 단체는 3개월마다 이들 어린이에게 지원 물품을 보낼 예정이며 분배 모니터링도 할 계획임. 이날 선적식은 코미디언 김병조 씨의 사회로 법륜(스님) JTS 이사장을 비롯해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김명혁 강변교회 목사, 홍보대사 텔런트 한지민 씨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음.

● “印 미탈, 北무산광산 지분인수 협의”(4/6)

- 인도의 세계적 철강회사 ‘글로벌스틸홀딩스’가 북한의 무산 철광석 광산의 지분 확보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이 6일 보도했음.
- 신문은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미탈의 락시미 미탈 회장의 동생인 프라모드 미탈 글로벌스틸홀딩스 회장이 북한을 방문, 고위 당국자들과 무산광산 지분확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채광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건설비용을 포함해 무산광산 개발에 필요한 투자금액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프라모드 미탈 회장은 자신의 방북 목적에 대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무산광산 지분 확보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음. 다만 이번 협의에 정통한 인사들에 따르면 글로벌스틸은 북한 당국과 무산 광산의 개발권을 특정기간 보유하는 협상을 진행 중임.
- 협상이 타결되면 글로벌스틸은 특정기간 광산 개발 권리를 갖게 되며 채굴한 철광석의 일부를 구입할 수 있음. 글로벌스틸이 개발권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무산 철광석 광산은 매장량



- 이 70억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애초 중국의 통화철강그룹에 50년간 개발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2년 전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화철강그룹은 당초 이 광산에 70억 위안(약 1조 1천 500억원)을 투입해 매년 1천만t의 철광석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었음.
 - 글로벌스틸과 북한 당국의 계약이 성사되면 이 회사는 국제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음.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맨섬(Isle of Man)에 본부를 둔 글로벌스틸은 불가리아, 나이지리아 등에서 제철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무산 광산에서 채굴되는 철광석은 자체 공장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동북아센터 책임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 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인도 모두 경제개발을 위해 철광석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북한이 광산개발 과정에 경쟁을 도입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이익을 늘리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음.
 -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프라모드 미탈 회장이 지난달 29일 4박 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영일 내각 총리 등을 만났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공동으로 아프간 파르완 PRT 주도”(4/11)

-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의 미국 지방재건팀(PRT) 민간대표인 에단 글릭 대표는 10일 (현지시각) “한국이 7월부터 바그람기지 안의 미국 PRT와 공동으로 파르완주의 PRT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단 글릭 대표는 이날 아프간 바그람기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는 아프가니스탄 PRT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아프간에서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방침에 따라 1개 주에서 한 국가가 PRT를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는 관행이 이뤄져 왔음.
- 미국은 한국이 오는 7월부터 파르완주 차리카르시에 PRT를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던 지난해 말 당시에도 바그람기지 안에서 소규모로 PRT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2월부터는 군 84명, 민간인 8명 등 총 96명으로 그 규모를 확대운영하고 있음.
- 글릭 대표는 “나토의 방침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확립된 원칙은 아니다”라며 “한국과 미국은 서로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파르완주에서



의 PRT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에 함께 응한 카일 히긴스 미국 PRT 군대표(해군 중령)는 “우리는 아프간 정부 및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체제 확립과 발전을 위한 교육과 함께 학교, 도로, 교량 등의 건설 등의 재건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 PRT가 오면 서로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글릭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의료지원 및 직업교육과 거버넌스 및 건설 등의 분야로 특화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이 어느 분야에 특화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많은 아프간 주민이 재건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그러면서 그는 “한·미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파르완주의 PRT는 양국이 모든 면에서 협력하고 조율하는 새로운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미의 파르완주 PRT 공동 주도는 양국이 작년 채택한 미래비전선언에 따라 한미동맹의 외연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남북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도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李대통령 방미.. 북핵대응·원전세일즈 외교>(4/11)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양일간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11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국함.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미국 방문임.
-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회의의 의장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바쁜 일정 등을 고려해 하지 않기로 했음. 이 대통령은 대신 12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해 한반도에 대한 확장 억지력 제공을 비롯한 한미 동맹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할 예정임.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별도 양자회담 계획은 없으나 정상회의 중 옆자리에 앉을 예정이어서 자연스럽게 북핵문제, 핵테러 등 핵안보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또 아랍에미리트(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양자회담을 갖고 UAE 원전 건설과 관련한 협력사안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함.
- 올해 처음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 테러를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핵안보 협력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으로 제안한 회의체임.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중국, 한국을 비롯한 47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핵 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정상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함.
-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한국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모



범적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이란과 함께 대표적인 핵 테러 국가로 지목돼온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의의 핵심 이슈인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음.

-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이 지난 1978년 고리1호 가동 이후 30년 이상 원전 무사고를 이어올 만큼 관리수준과 기술력이 높고 UAE 원전공사도 수주한 ‘원자력 기술강국’이라는 점을 홍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회의 참가국의 절반 이상이 원전을 처음 짓거나 추가로 보유할 계획을 가진 ‘잠재적 수요국’이라는 점을 고려한 전략임.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마다 역점을 두는 ‘세일즈 외교’이기도 함.
-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국의 정상으로서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과시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분야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핵안보 분야 최상위 포럼인 이번 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인할 것”이라며 “핵에너지와 밀접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도 주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밖에 이 대통령은 한국전 6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현화한 뒤 참전한 미군 용사 출신 전·현직 의원, 참전용사회 대표, 전주한대사, 전 한미연합사령관들과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 벨 전美사령관 “전작권 이양 빠를수록 좋아”(4/10)

-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9일 한미 양국 간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 “한국군은 전작권을 운영할 능력이 있으며, 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한 벨 전 사령관은 미주 한인들의 미국정착을 지원하는 인터넷 뉴스매체인 ‘케이아메리칸포스트’(KAmerican Pos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 매체가 9일 보도했음.
- 벨 전 사령관은 테네시주 채터누가 자택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군은 북한군을 전력, 전술 등 모든 면에서 능가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도 재래식 군대로는 한미 양국 군대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이양은 매우 적당한 시기이며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그는 한국 내에서 전작권 이양 재협상론이 제기되는데 대해 “일부 한국군 예비역 장군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작권 이양이 정치적으로 주한미군철수 명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비밀계획이나 다른 논의는 워싱턴에서 전혀 없으며, 이는 앞으



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주한미군은 1년간 혼자서 근무하는데 독일, 일본처럼 가족과 같이 3년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주한미군들에게 집은 한국이 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 간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미군 가족들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협조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음.

- 그는 “내가 독일에서 근무할 때 아내는 러시아 전략 핵무기를 12마일 앞에 두고 생활했으며, 가족이 같이 있다는 것은 위험을 같이 감수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한 뒤 “몇 년 전 주한미군 2사단의 한 여단이 이라크로 배치된 후 한국으로 오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간 적이 있지만 주독 미군 기갑 1사단은 이라크에 배치되었다가 1년 임기 후 모두 ‘집’으로 돌아왔다”면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3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기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음.
- 그는 주한미군사령관 근무경험과 관련, “가장 큰 보람은 재임 중 한반도 평화를 지켜낸 것이며, 가장 큰 아쉬움은 평화적인 통일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북한정권이 붕괴되거나 그 지도자들이 자유를 받아들여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내 손녀 진희(한국 입양아)의 손을 잡고 무너진 휴전선(DMZ)을 걸어서 넘어가는 게 꿈”이라고 말했음. 벨 전 사령관은 재임당시 ‘군인다운 군인’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사령관 이임식에서는 부인인 케이티 여사를 가리키며 “당신이 없었다면 39년간의 군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음.
- 그는 퇴역 후 고향인 테네시 차타누가로 돌아왔으나 부인이 면역시스템 이상으로 몸의 항체들이 건강한 폐 세포를 공격하는 희귀한 폐병에 걸림에 따라 지극정성으로 병간호에 나서고 있음. 이 병은 폐 이식을 통해서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희귀병으로 케이티 여사는 작년 3월 어렵게 폐 이식을 받았고, 신체의 거부반응도 없어 현재는 자택에서 요양 중임. 이 과정에서 벨 전 사령관은 수술 직후 병원에 아파트를 얻어 4개월간 병간호를 했고 지금은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회복훈련을 같이 받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케이티 여사의 회복과정을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고 있음.
- 그는 “아내가 39년 동안 군인인 저를 위해 헌신했는데 지금은 제가 아내를 위해 작게나마 헌신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축복입니다. 다시 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39년 군 생활 동안 많이 떨어져 생활했는데 지금은 서로 더 잘아가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음.

● <靑 “한미 핵안보 파트너십 재확인할 것”>(4/9)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한·미간 핵안보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한편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청와대 외교안



보라인 핵심 참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 정상 오·만찬, 핵안보 정상회의의 1·2차 세션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면서 “한·미간 핵 안보 논의, 국제 원전시장 개척, 글로벌 리더십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우선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몇 차례 회동 기회를 갖고 양국 간 전략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두 정상은 별도의 양자회담 계획은 없으나 정상회의 중 옆자리에 앉을 예정이어서 자연스럽게 북핵문제, 핵테러 등 국제사회에서 가장 휘발성 있는 핵 안보 이슈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임.
- 또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핵무기 감축 계획 및 확장 억지력 제공 등의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상대로 원전 수출 세일즈 활동도 벌인다는 계획임. 특히 현지시간 오는 13일 오전 정상회의의 1차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이후 단 한차례의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선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참모는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47개국 가운데 20개국이 신규 및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모범적인 원자력 국가로 발전해온 우리의 우수성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 이밖에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국 정상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과시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문제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핵안보 분야 최상위 포럼인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도 주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 한·UAE 정상회담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 다자·양자 외교활동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2+2’전략회담, 6월 서울 개최 유력(4/9)

-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이른바 ‘2+2 전략회담’이 오는 6월께 서울에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국방장관 회담 일정이 막바지 조율 중



인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로선 오는 6월 서울 개최가 가장 유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올해 양국 간 ‘2+2 회담’을 개최, 전략적 동맹 과제를 논의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음.

- 당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당국은 수차례 실무협의를 갖고 첫 회담 일정을 조율해 왔으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3월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의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2+2 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 양국이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6월 서울에게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올해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상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임.
-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은 현재 미국과 일본 간에 이뤄지고 있으며, 한·미간에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미국과 중국은 국무·재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가 중대 변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외교 및 국방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한다는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됨. 이번 회담에서는 또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북핵문제, 기후변화 대책 등 양자 간 현안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결론이 주목됨.
- 아울러 천안함 침몰사고 수습 공조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오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일각에서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청와대 핵심 참모는 “시기와 장소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실무적 차원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폭넓은 협의를 통해 미래동맹 발전 과제들의 개념이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국방 “전작권 문제, 국가적으로 검토 중”(4/8)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8일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와 관련,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및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전작권 전환 재검토 필요성을 묻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있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전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제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것은 아니지만 결정된 사안 자체가 적절치 않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 이어 북한이 전군에 ‘긴장상태 유지’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추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명확한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부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나온 뒤 만약 북한과 연관되면 그때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음.
- 그는 이밖에 “(북한이) 지상에 있는 무기체계를 해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작전형태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씩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고, 의무 후송헬기 확보 문제에 대해선 “2015년까지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음.

● “미, 對韓 FTA 비준 위해 진력해야”(4/7)

-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동맹관계 발전은 물론,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회 비준에 진력해야 한다고 존 햄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이 7일 강조했다.
- 햄리 소장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 23차 KF포럼에서 ‘오바마 정부 1년: 동아시아 정책방향’ 제하의 강연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지난 1년간의 집권 평가에 대해 “대북정책을 포함해 실용적이고 강력한 부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 햄리 소장은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기초가 되는 등 지정학적 전략 측면에서 유리하고 한국과의 관계 강화 효과도 있는 FTA협정에 대한 의회의 신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 실망스럽다”며 “외교정책 외에 무역정책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향후 무역정책 전망에 대해 햄리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연두교서를 통해 수출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히는 등 점차 전향적인 무역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 대해 햄리 소장은 “부시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며 “미국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잘못을 시인하고 위협 일변도의 정책에 변화가 있으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 햄리 소장은 “부시 행정부 때 일각에서 대북 평화협정 체결뿐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기반이 된 북대서양헌장(North Atlantic Charter)을 모델로 ‘동북아헌장(Northeast Asia Charter)’을 추진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시기상조적인 정책안도 있었으나 오바마 정부는 대북 강경노선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햄리 소장은 전시 작전권 이양 시기의 재조정 문제에 대한 국내외 논란에 대해 “한국군은 세계 5위권에 포함되는 등 훌륭한 군대로 발전해왔다”며 “작전권 이양시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진심어린 대화가 필요하고 지정학적 고려와 함께 군사, 한국과의 파



트너십, 동맹관계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지정학적인 권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음. 강연에서 수차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험리 소장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은 경제에 대한 타격 없이 방위능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현실적인 판단이다”고 말했다.
- 다만, 미군 주둔의 배치와 규모는 조정될 수 있고 양국이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에는 변함이 없다고 험리 소장은 덧붙였다.
- 그는 질의응답 순서에서도 “미군의 주둔 성격은 50여 년간 계속 바뀌어왔고 한국군이 강한 군대로 성장한 만큼 주둔 방식 등은 진화하고 바뀔 수 있지만 핵심적 취지나 기본적인 목표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미국의 대일 및 대중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험리 소장은 낙관했음. 일본의 경우 “하토야마 정부 출범 후 양국관계의 관리가 어려운 가운데 일본 민주당 지도부가 미일동맹의 약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 안도하면서도 “일본이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등 이런 변화가 새로운 전략이 되지 않도록 양국 간 조율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중관계 악화에 대해 험리 소장은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 강경 자세를 취해왔다”고 분석한 뒤 “양국 관계에 일부 잡음(scratchy)은 있었으나 근본적인 미중관계는 튼튼한 만큼 양국이 향후 위안화 절상 문제 등 현안들을 잘 관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음.
- 험리 소장은 강연 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최근 방미에 대한 질문을 받고 “CSIS에서 특강을 한 황 전 비서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북한정권이 아주 취약하고 분열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황 전 비서는 북한의 언행에 과민반응할 필요 없다고 자주 얘기했는데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험리 소장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지만 김정일 정권의 최후가 불확실하고 김정일의 후계자도 확실치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음.
- 초계정 천안함 침몰과 관련, 험리 소장은 “한국의 모든 군인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고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한다”며 “사건의 결과가 밝혀지면 매우 복잡한 국면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미국은 한국의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지지하고 도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 한·중 관계

● 中 “안중근 의사 존경.. 유해발굴 협조”(4/9)

- 중국 정부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지난 6일 왕광야(王光亞)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한·중 전략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안의사 유해발굴에 대해 중국 정부가 협조해달라는 뜻을 전했다는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 이에 대해 왕 부부장은 “안 의사는 한·중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며 한국 정부가 안 의사와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오면 “발굴사업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일본으로부터 안 의사 유해발굴과 관련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일본 정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한구 “중동북, 한국 동반성장 파트너”(4/9)

-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9일 “중국 동북지역은 한국과 동반 성장할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이라며 “첨단산업 분야의 폭넓은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열린 ‘쓰수이(泗水)과학기술타운’개발 프로젝트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중국 동북은 역사, 지리, 문화적으로 한국과 가까울 뿐 아니라 동북 진흥책에 따라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이 의원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던 시대는 지났다”며 “중국의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기술인력을 적극 활용,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국 고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중국 시장 개척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부상한 동북지역을 전략적인 투자 대상지역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공업지대였던 선양이 최근 들어 IT와 의료 등 첨단산업으로 재편하는데 적극적”이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의료특구로 지정된 대구·경북과의 경제 교류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의원은 이날 쓰수이 과학기술타운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에 참석한 대구·경북지역 기업인 20여 명을 인솔, 선양을 방문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의 한솔재생산업과 메디엠 등 2개 기업은 선양시와 쓰수이과학기술타운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선양 치반산(棋盤山)개발구에 위치한 쓰수이과학기술타운은 랴오닝성이 바이오산업



기지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6km² 규모의 첨단산업단지임.

다. 한·일 관계

● “한·일, 아프간에서 콩 재배 협력 합의”(4/9)

- 박해윤 주아프가니스탄 대사는 11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프가니스탄 콩 재배사업에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박 대사는 이날 아프간 바그람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간 주재 일본대사가 지난 3월 초 만났을 때 일본이 올해도 콩 재배 사업에서 재정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올해 콩 종자 6개 품종 220kg을 아프간에 제공하고 일본은 콩 종자 재배 및 보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해 1월 한·일 정상회담 및 같은 해 2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대(對)아프간 지원 관련 양국 정부 간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콩 재배 보급지원 사업과 직업훈련 교관 양성사업, 공동연수 사업 등을 시행했음.
- 특히 한국은 아프간 토양에 적합한 콩 품종 개발 지원을 위해 한국산 콩 종자 5개 품종 250kg을 아프간 정부에 무상 지원, 아프간 내 10개 주(州)에서 시험 재배를 실시했고 일본은 한국산 콩 종자 시험 재배 예산 10만 달러를 비롯해 총 37만 달러를 지원했음.
- 외교부 당국자는 “작년 9개 주에서 콩 시험재배가 성공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아프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1개 품종을 추가한 6개 품종을 보급, 시험재배를 추가 실시하고서 아프간 토양에 적합한 한국 콩 종자를 공식 선정해 아프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외교부 “독도 영유권,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로”(4/9)

- 외교통상부는 9일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통한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교통상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서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외교청서에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할 수 있는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보고했음.
- 외교통상부는 “독도관련 고지도와 고문헌 등 사료 수집과 국제법 논리 개발을 강화하고, 독도가 국제분쟁지역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며 “울릉도에 독도생태교육센터 설립, 독도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교통상부는 또 ▲국제사회에서의 독도영유권 인식 제고 ▲해외



독도 오염표기 시정 ▲독도연구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해적에 피랍된 삼호드림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5명을 포함 전체 24명의 신변은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외교부와 국방부, 국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상황실이 24시간 합동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외교통상부는 “해적은 정부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협상금을 올리고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선사 측이 전면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했음.

● <외통위, 독도 ‘조용한 외교’ 논란>(4/9)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9일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음.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반복되는 역사 왜곡에는 ‘조용한 외교’도 한몫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으나 외교부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감정적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관례가 아니라 자국 이익임을 일본 외무성이 보여줬다”면서 “실리나 실용도 좋지만 국민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가) 손해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방수 외교라고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음.
- 같은 당 진영 의원도 “조용한 외교만 한다고 하지 말고, 외국 정부나 외국 민간을 상대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 탈취의 기도이자 역사적 맥락에서 재침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과거 정부의 입장과 변함 없는가”라고 물었음. 같은 당 박상천 의원은 “국민에게 국제법 강의를 하지 말고,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점령한 이후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는 우리 영토가 됐다고 주장하라”고 제안했음.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만큼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면서 “서로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음.
- 유 장관은 그러면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맥락에서 독도에 대한 재침략이라는 이전 정부의 입장과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다”고 동의했음. 한편 유 장관은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엔이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정전위원회가 매년 한반도 상황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는 만큼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또 토마호크 미사일 폐



기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억지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은 이외의 공군력을 통해 핵을 억제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유 장관은 이와 함께 귀화한 외국인은 원적(原籍)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온두라스 국내법 때문에 주한 온두라스 대사로 내정됐다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이 철회된 교포 강영신(57. 여) 씨 대신 그의 사위가 주한 온두라스 대사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 日 “독도와 북방영토 대응 같지 않다”(4/9)

- 일본 정부가 독도와 러시아령 ‘북방영토’(일본 측 표현)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9일 오전 열린 각의에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령 북방영토와 독도문제의 해결 방침과 관련, “반드시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이는 신당대지의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이 “외무성 간부가 북방영토 반환운동 관련 행사에는 참석하면서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 관련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요구한데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임.
- 일본 정부는 그러나 답변서에서 “북방영토에 대한 대응과 다케시마에 대한 대응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힐 경우 상대국과의 외교상 지장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은 피했다. 하지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과거 자민당 정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런 발언은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독도의 일본 영토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말장난’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임.
-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영토’는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 섬으로 국제적으로 쿠릴열도로 통합.
- 1855년 모다 조약을 통해 일본이 차지한 이래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점령함으로써 그 아래에 있는 4개 섬은 일본령으로 인식돼왔으나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소련이 자국 영토로 지배해왔다. 일본은 집요하게 러시아에 이들 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국제법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고 있음.

● 하토야마, ‘독도는 일본 땅’ 입장 불변(4/8)

-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에 일체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8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7일 오후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과거 자민당 정권의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임. 하토야마 총리가 작년 9월 취임 이후 독도 문제에 대해 이처럼 명확한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임. 그는 그러나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표현은 피했음.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기존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다고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히라노 관방장관도 ‘불법점거’라는 표현은 피했지만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임.
- 다만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 여부를 묻는 의원 질문에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하고 싶다”면서 “그 표현(불법점거)을 쓰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정하고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공식 입장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돼 있음.
- 한편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하토야마 총리의 독도 발언과 관련, “정부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기도나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보다 확고히 해나간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착실히, 그리고 충실하게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라. 미·중 관계

● 폴슨 前 美재무 “위안화 환율 유연화 해야”(4/11)

-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은 10일 “위안화 환율의 유연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슨 전 장관은 이날 보아오포럼 개막에 앞서 룽용투(龍永圖) 보아오포럼 사무총장과의 대담에서 “위안화 환율 절상이 내수 확장과 고부가가치 수출 확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처에도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중국이 개혁으로 큰 이득을 봐 왔고 그런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위안화도 개혁의 일환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폴슨 전 장관은 최근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 등으로 인한 미·중 갈등과 관련해 “입장차이가 있을 때에는 잦은 대화와 접촉으로 공통의 이익을 찾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며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분쟁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장(場)이 될 것”이



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중 양국은 아주 중요한 관계로, 중국 경제가 잘 돼야 미국에도 좋고 반대로 미국 경제가 잘 돼야 중국에도 좋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무역문제는 항상 긴장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번 보아오포럼에서 새 이사로 선임된 폴슨 전 장관은 개막식 참석에 앞서 7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9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과 각각 면담했다.
- 이에 앞서 지난 8일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서우두(首都) 공항 귀빈실에서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와 위안화 문제와 관련해 75분간 회담한 뒤 곧바로 귀국길에 올라 양국이 환율 문제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미·중, 환율 논의.. 의견 접근 관측(4/9)

-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8일 중국을 방문,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와 위안화 환율 문제를 논의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회담이 끝난 직후 “양측은 양국경제 관계 및 세계경제 정세, 내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틀 내에서의 경제대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늦게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 귀빈실에서 75분간 회담했으며 가이트너 장관은 회담 직후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 미국 재무부도 환율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양측은 미·중 경제관계와 세계 경제 정세,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관련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과 중국 정부는 모두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위안화 환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키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분위기로 볼 때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을 것으로 관측됨. 중국은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부기관과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잇따라 환율 절상을 시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으로 최근 임명된 샤빈(夏斌)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장은 8일 중국은 가능한 한 빨리 금융위기 이전의 관리 변동 환율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샤 위원은 위안화 환율 조정이 시작되면 투기를 견제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 과감하고 신속하게 절상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의 바수쑹(巴曙松) 부소장도 6일 위안화의 하루 환율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절상도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7~8일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5월 25일 이후 10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



음. 외신과 미국 언론들도 중국이 조만간 위안화를 절상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음. 뉴욕타임스(NYT)는 8일 “중국 정부가 절상폭은 크지 않겠지만 조만간 위안화를 절상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현재의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가이트너 장관의 이번 방중은 양국 정상회담과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환율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사전에 조율하는 성격이 짙어 보임.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2~13일 워싱턴을 방문,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양국은 내달 하순 베이징에서 제2차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함. 전략대화외 경제대화 등 2개 트랙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경제분야는 가이트너 장관과 왕치산 부총리가 각각 자국 정상의 특별대표로 참가함.

● 가이트너 美재무 방중..환율 논의(4/8)

-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8일 중국을 방문해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와 위안화 환율 문제를 논의함. 앤드루 윌리엄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7일 인도 뭍바이에서 “가이트너 장관과 왕 부총리는 그동안 만날 기회를 찾기 위해 서로 논의해왔다”면서 방중 기간 양국이 경제문제에 관해 논의한다고 발표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8일 보도했음.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가이트너 장관의 방중은 시기적으로 특별하다”면서 “위안화 환율 문제가 양국 간에 논의될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동안 수차례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가이트너 장관은 인도 방문기간에도 “중국이 좀 더 유연한 환율체제를 갖추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중국 측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음.
- 가이트너 장관이 이틀간의 인도 방문을 마치고 중국행을 결정한 것은 위안화 문제에 관한 양국의 분쟁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필립 레비 미국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음. 중국은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부기관과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잇따라 환율 절상을 시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의 바수쑹(巴曙松) 부소장은 6일 브리핑에서 위안화의 하루 환율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절상도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성명을 통해 수출업계의 ‘잠재적 위험’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대변하고 있음. 위원



회는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업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위안화를 균형 있고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 미·중 양국은 위안화 환율을 포함한 각종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나 중국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계획을 밝힌 직후 미국이 환율정책보고서 발표시점을 오는 15일로 미룬다고 발표, 해빙 무드가 점쳐져 왔음.

마. 미·러 관계

● <미·러 핵 감축 협정 서명.. 해빙 가속>(4/9)

- 미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은 8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에 서명하면서 양국 관계의 해빙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됨.
- 이날 세계 군축 역사에 획을 그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서명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 직후 “이번 서명으로 양국 관계 악화는 끝났다”고 천명했음.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양국 관계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됐다”고 환영을 표시했음.
- 이번 군축 협정은 양국이 1년 전 양국 관계를 ‘리셋(재설정)’하자고 손을 잡고 나서 처음 만들어 낸 결과물임. 이번 협정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신뢰와 협력 분위기가 고양될 것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임. 러시아는 이미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위한 물자 조달에 자국 영토와 영공을 개방하고 있음. 한 미국 관리는 “수십 년 간 양측이 서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군대가 러시아 영토를 지나가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음.
- 러시아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신(新) 아프가니스탄 전략에 협조하기로 했음. 한동안 냉담했던 이란 추가 제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이날 양국 정상은 이란이 우리농 농축을 중단하지 않고 핵협상을 거부하면 추가 제재를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음. 앞서 7일 러시아 최대민간 석유기업 루크오일은 이란에 대한 원유 선적을 중단했음.
- 세르게이 프리호드코 크렘린 대외정책보좌관은 “이번 협정은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양국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됐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건설적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음.
- 부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양국은 코소보 사태,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계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확대, 그루지야 전쟁 등으로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최악의 관계를 연출했음. 그러다 지난해 2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화해 분위기가 감지됐음.
- 지난해 9월 미국이 MD 계획을 철회하면서 신뢰가 쌓였고 이번 군



축 협상이 관계 개선의 하이라이트가 됐다. 이번 협정 서명이 경제 통상 등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최근 미국을 방문한 안드레이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구체적 프로젝트의 토대 아래 세워져야 한다”면서 “우주탐사, 항공, 원자력 산업 등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내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지만 올 여름 또 한 차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양국 관계를 시험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그때마다 웃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없지 않음. 역시 가장 큰 우려 사안은 오바마 행정부의 새 MD 계획임.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주 “미국의 MD 계획이 지금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린다면 이번 군축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크렘린은 이날 서명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이 MD 추구를 자제하면 이 협정은 계속 생명력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MD와 관련해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당장 이번 협정에 대한 양국 의회 비준이 이후 양국 관계를 점칠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이미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미국 상원 의원들과 비준 문제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하원에서는 양국이 같은 날 의회 비준을 마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두마를 거쳐 연방의회(상원)를 통과해야 하고 미국은 상원에 우선 투표권이 있음. 이와 관련해 프리호드코 보좌관은 “우리는 비준 통과를 자신하며 비준 통과 시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우려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라고 말했다.
- 현재 러시아 상·하원은 여당이 장악하고 있어 협정 비준에 별문제가 없음. 하지만 미국 상원은 민주당이 적어도 8표의 공화당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비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협정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다면서 상원의 연내 비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美·러 정상 핵무기감축협정 서명(4/8)

- 미국과 러시아가 8일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역사적인 핵무기 감축 협정을 체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 성에서 1991년 발효돼 지난해 12월 만료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하는 새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현재 2천200기에 달하는 장거리 핵탄두를 1천500기로, 지상 및 해상배치 미사일은 1천600기에서 800기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서명은 냉전 시대의 협정을 대체하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약속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가시화



한 첫 번째 성과이자, 미·러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는 이정표로 간주됨.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는 협정은 효력이 10년간 지속하며,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이 5년 연장될 수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협정 서명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핵안전과 핵무기 비확산, 그리고 미·러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협정 서명은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도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자제해야 협정이 성공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MD 체제가 러시아와의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더 많은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 상원의 협정 비준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 기내 브리핑을 통해 핵 관련 협정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다면서 상원의 연내 비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날 오전 프라하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협정 서명에 앞서 별도 양자 회담을 열어 핵무기 감축, 양국 간 협력 강화, 이란의 핵개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올해 여름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음.
- 양국 정상은 또 이란이 핵무기 개발 시도를 계속할 경우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거나 국제사회의 신뢰를 위협하는 이란의 어떤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이란이 국제사회의 많은 건설적 제안들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인식 장소가 프라하로 결정된 것은 지난해 4월5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곳에서 대중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세계적 비핵화 노력의 역사적 장소로 자리매김한 데다 동유럽이 미국과 러시아의 화해와 협력을 시험하는 주 무대임.
- 노벨위원회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그의 비전과 노력”을 선정 배경의 하나로 제시했었음.
-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협정 서명 후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중·동부 유럽 11개국 정상과 만나 새 협정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임. 그는 다음날 체코의 클라우스 대통령, 안 피셔 총리와 회담한 뒤 귀국함.



바. 중·일 관계

● 中, 日 마약사범 사형집행(4/6)

- 중국이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6일 마약 밀매 혐의를 받던 일본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음. 관영 신화통신은 마약 밀매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본인 아카노 미쓰노부(赤野光信, 65) 씨가 이날 랴오닝(遼寧)성에서 사형에 처해졌다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음.
- 아카노씨는 2006년 9월 다른 남자(징역 15년형 확정)와 함께 랴오닝성 다롄(大連) 공항에서 일본에 마약 2.5kg을 몰래 보내려다가 체포돼 지난해 4월 사형 판결이 확정됐음.
- 중국 법원은 그가 마약 밀매를 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사형집행은 중국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법률에 따라 그에게 충분한 권리가 보장됐다고 밝혔음.
- 중국에서 일본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일본이 거듭 우려를 표명하는 등 양국 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아카노 씨에 대해 7일 후 형을 집행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지했으며 통지를 받은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지난달 30일 사형 집행 방침을 통보받고 일본은 중국 정부의 조치를 주목해 왔다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음.
-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도 일본 국민의 감정을 들어 사형 집행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음. 지바 게이코(千葉景子) 일본 법무상도 “사형 집행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면서 중국의 사형집행이 일본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음.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6일 “일본이 사안을 이성적으로 다루길 희망한다”면서 “중국은 중·일 관계의 발전을 중시하며 이 사안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음.
- 장위(姜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사법당국이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했고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사전에 통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일본은 아카노씨 외에도 중국이 마약 밀수죄가 확정된 일본인 3명에 대한 추가 사형 집행계획도 통보해 옴에 따라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2일 청용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음.
- 장위 대변인은 일본인 마약사범 3명에 대한 사형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중국의 유관당국이 일본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구체적인 집행상황은 사법당국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마약범



죄는 세계가 공인한 매우 심각한 범죄로서 마약사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앞으로 중대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음.

-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 영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영국인 마약사범 아르말 사이크(당시 53세) 씨를 사형에 처했으며 2001년에는 마약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신모 씨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했음.

사. 기 타

● 한·중·일 내주 도쿄서 투자확대 협의(4/10)

-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오는 12~15일 일본 도쿄에서 제10차 투자협정 협상을 벌인다고 외교통상부가 9일 밝혔음. 이들은 국가 간 투자여건 개선 및 투자 확대, 투자기업의 보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 우리 측은 정인균 외교부 지역통상국 심의관이, 일본 측은 마사토 다카오카 외무성 경제국 참사관과 게이스케 사다모리 경산성 통상정책국 통상교섭관이, 중국 측은 순평 상무부 외국투자관리사 부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은 2007년 1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합의된 것임.

● “佛서 재처리 핵연료 日로 이송”<그린피스>(4/8)

- 일본 전력회사의 주문으로 프랑스에서 재처리된 핵연료가 조만간 일본으로 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플루토늄과 재처리된 우라늄 혼합산화물(MOX)을 실은 배가 빠르면 8일 밤 프랑스 셸부르 항을 출발해 일본으로 향할 것이라고 7일 밝혔음. 16t에 달하는 MOX는 셸부르 항에서 20km 떨어진 핵 재처리 공장에서 가공됐으며 이날 오전 항구로 이송될 것이라고 그린피스는 설명했다. 일본이 재처리된 핵연료를 해상을 통해 수송한 것은 1999년 이후 4번째임.
- 셸부르 항만 당국은 8일부터 10일까지 항구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물의 화주는 일본의 규슈전력과 간사이전력인 것으로 전해졌음. 그린피스는 ‘방사성 화물’이라고 지칭한 이 화물이 핵확산 위험을 증대시킨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음. 그린피스는 이 물질이 핵무기 제조에 활용되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참고 1] <인터뷰> 햄리 美 국제전략문제研 소장(연합뉴스, 4/7)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가 시급하지만 특정국가에 대한 위협이나 극도로 불합리한 행동에 보상하는 식으로 재개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존 햄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원하며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오픈’돼 있다는 생각이지만 평양 측에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순한 접촉을 위한 양보도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햄리 소장은 이어 “외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질적인 것을 얻는 것이지 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햄리 소장은 이에 앞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관한 제23차 KF포럼에서 ‘오바마 정부 1년: 동아시아 정책방향’을 제목으로 행한 강연에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포함해 실용적이고 강력한 부시 정부의 외교정책 기초를 유지,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인터뷰에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냈고 현재 CSIS의 한국 전담 연구원(Korea Chair)으로 활동 중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배석, 일부 사안에 대해 햄리 소장의 견해에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클린턴 행정부 때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햄리 소장은 지난 2000년 미국 내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CSIS 소장으로 취임했으며 현재 미국 국방정책자문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차 교수를 영입하는 한편 한국석좌 연구직을 설치, 워싱턴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인터뷰에 앞서 “빅터 차 박사는 예리한 분석으로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안보·전략문제 전문가이다”며 차 박사를 치켜세웠다.

다음은 햄리 소장 및 차 교수와의 문답.

- 오바마 정부도 부시 정부처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접근 방식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나.

▲ 그럴 것으로 본다. 우선 미국은 핵심전략 추진에 있어서 중국과 전략적인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 또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양국 간 ‘전략적 목표’는 공유하면서도 이를 이루기 위한 ‘타이밍’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우리만큼 북핵 문제 등 사안에 대해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양국이 공통의 의지를 갖고 적극 협력해가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를 놓고 볼 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대북 봉쇄나 북한의 무



장해제가 어렵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한미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 ‘중국의 대북 영향력 한계’ 지적과 함께 ‘러시아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는데.

▲ 러시아는 동아시아정책에 대해 명확한 정책이 없이 필요에 따라 임시변통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본다. 물론, 러시아는 6자회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왔고 회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됐으나 러시아는 미국이나 북한보다 중국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빅터 차 교수) 러시아는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 틀 안에서 피해를 주거나 해를 끼친 것은 없으며 나름대로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 왔다. 다만,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뿐이다. 북한에게는 양자, 다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5년 베이징에서 타결된 9.19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복귀, 약속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은 이미 합의한 경험이 있어 어려운 게 아닌데도 평화협정 체결, 제재해제 등에 집착한다. 이처럼 모호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5개국이 원하는 것은 “9.19성명에서의 복귀”이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북한이야말로 선택할 게 많은데 안 할 뿐이다.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최근 방미, CSIS에서 연설했는데, 방미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 황 전 비서가 CSIS에서 특강을 한 뒤 저녁 식사 등을 통해 대화하면서 북한 시스템이 아주 취약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 북한정권이 얼마나 존속 가능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유익했다.

- 황 전 비서와 주로 나누는 얘기는.

▲ 북한의 현 상황이나 지도부의 성격 등에 대한 견해들을 주고받았다. 북한 군대가 일반인들의 생각에 비해 약하고 지도층이 분열돼 있는 등 북한 상황이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또, 북한정권은 경찰력을 동원한 주민통제와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여줬고 도발적 성향의 접근방식 등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지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권위주의 정부의 힘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모르겠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 사후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같다.

-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의 주펑(朱鋒) 교수 등은 “중국과 미국이 북한의 긴급 사태에 대비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정부의 입장은.

▲ 중국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북에게



비난당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이를 공식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 북 몰락 이후 미·중 간 타협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는데.

▲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100여 년 전 (한국의 장래를 놓고 열강들이 타협했던) 역사적 경험으로 그런 느낌을 갖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이 같은 견해는 전술과 전략을 혼동한 데서 나온 것이다. 북한 붕괴 시 전술적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깊이 우려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는 한국과 이해관계의 공유를 위해 진력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미국은 당연히 한국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북한을 통합하도록 협력할 것이다. (빅터 차 교수)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의 이해도 맞물린 사안 등에 대해) 중국과 타협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볼 때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duckhwa@yna.co.kr)

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5%ad%ec%a0%9c%ec%a0%84%eb%9e%b5%eb%ac%b8%ec%a0%9c&contents_id=AKR20100407153700069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